



안보전략논단

[2025년 4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50(25-4) | 2025. 4. 1

우수한 군 간부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 긴급소요
김정기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
박용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의 북한군 포로
장광열

우수한 군 간부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 긴급소요

김 정 기

(향군 논단위원, 연성대 국방군사학과 교수)



1. 문제의 심각성 정도

현재 군 간부 인력의 붕괴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병 의무복무기간을 계속 줄여온 데다가 최근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맞추므로써 초급간부와 급여 차이가 거의 없도록 만든 담론의 후과이다. 즉 육군과 해병대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서 이에 대비한 단기복무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28개월이고,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48개월)이다. 계급 및 신분별 의무복무기간과 기본 급여의 수준을 놓고 유리하게 선택한 결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작금의 창끝 전투력을 지탱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즉 초급간부 충원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급기야 6년의 의무복무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3사관학교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10년의 장기복무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도 일반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자퇴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부사관의 경우도 모집소요 대비 2022년에 86%까지 하락하였고, 2023년 부사관 월급용으로 책정된 인건비 중에서 1,410억 7,000만 원이 불용되어 사상 최고

액을 기록하였다. 연간 최소 1,70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육군 부사관 임관 및 전역 현황

구 분(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임 관(명)	5,820	5,200	5,420	4,670	3,360	1,280
전 역(명)	3,960	3,610	3,380	3,640	4,830	3,170

모집과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견간부 역시 복지 및 처우개선이 지지부진하고 2~3종의 업무로 대거 전역을 신청하는 등 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된 원인은 그동안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국방혁신 4.0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첨단 무기체계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군 간부의 인력충원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였고, 수십 년간 쌓인 구조적 문제를 홍보 강화와 수당 인상 등 단기처방 위주의 운용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으므로 법규 개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간부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시급한 군인사법 개정 소요

법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원이 장교, 다음 부사관을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홍보 강화, 수당 인상, 복지·처우개선에 우선하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요구이다. 안정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간부로 충원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단기복무 간부(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병 복무기간과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부사관의 계급에서 하사와 중사, 중사와 상사 사이의 2개 계급을 신설하여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임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잠재적으로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병 계급을 신설하여 장차 모병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 병과 단기복무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 일치

병(육군·해병대) 의무복무기간은 2년(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으로,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간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6조에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임용 부사관 외에는 단축 규정은 없다. 장교나 부사관 모두 단기복무를 원하는 간부는 병역의무를 간부로서 복무를 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보다 급여가 많고, 리더십 경험 및 전역 후 취업 등에서 유리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급여가 비슷한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열정을 기대하지만, 우수자원이 군 간부보다는 병 복무를 선호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급히 군인사법의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병사와 일치시켜 모두 2년(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3개월)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항을 ‘병역법의 병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기복무 간부의 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위한 기간임을 인정하고 병역법 병 복무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과 자동적으로 연동할 필요가 있다. 숙련도를 요구하는 부사관 복무기간 단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교, 장교 전체가 어렵다면 학군장교(ROTC)만이라도 먼저 시행해 보고 효과를 따져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나. 부사관 계급체계 및 우수자원 임관제도 개선

부사관 계급은 오랜 기간 4계급(하사, 중사, 상사, 원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2세에 하사로 임관하여 55세 원사로 전역하면 33년을 4계급으로 생활하므로 평균 8년을 1개의 계급에 머무르게 된다. 장교의 경우에는 10개 계급으로서 장성급을 제외하더라도 6개의 계급(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으로 나뉜다. 부사관 제도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계급을 추가하자는 의견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 특히 하사와 중사의 최저 복무기간이 2년과 5년으로, 소위와 중위의 최저 복무기간 1년과 2년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있어 사기진작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병 복무기관과 함께 단축한다면 하사로 전역하는 인원도 지금보다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3조 계급에 하사와 중사 사이에 가칭 범사(範士), 중사와 상사 사이에 선사(先士)를 추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급장은 원사 계급장이 상사 계급장 위에 작은 별을 표시하고 있듯이, 하사 계급장 위에 노란색 작은 다이아몬드는 범사(范士), 중사 계급장 위에 노란색 작은 영관급 꽃(대나무) 모양을 선사(先士)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계급의 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봉급을 인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으로 국방, 군사, 부사관 계열의 과정을 이수한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부사관의 임관 계급을 범사로 한다면 보다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가진 병 계급 신설

2025년 기준 병 봉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매달 50만 원의 장병내일적금 지원금 지급으로 병장은 200만 원의 시대가 열렸다. 가장 짧은 복무기간에 약 2,000만 원의 목

돈을 장병내일적금으로 만들어 전역할 수 있는 병 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우수한 병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었으며, 미국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잠재적으로 간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학사(미군의 스페셜리스트는 Community Collage 졸업 이상 학력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남녀 지원병을 신병훈련 후 상병과 병장 사이에 해당하는 가칭 ‘수병(首兵)’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제3조 계급 ④항을 ‘병은 병장, 수병,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다. 계급장은 한글의 사(士)와 같은 모양으로 제정하여 관련 규정 에 반영하는 것이다.

수병 계급이 부여되는 순간부터 분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바로 현역 부사관이나 간부사관 장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부를 충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수병은 입대 후 신병훈련 수료 직후부터 상병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게 됨으로써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선 선택하는 유인 요소가 된다. 바로 간부가 되기에 부담을 가진 청년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에서 병 경험을 통해 군 생활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병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간부(장교, 부사관)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여군도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3.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은 첨예한 여야 대립의 지속으로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 등을 볼 때 그 시급성을 인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세미나, 학술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더 미룰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조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군에 입대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밀레니엄(MZ) 세대를 넘어 소위 알파(A) 세대라고 칭한다.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해득실의 계산이 빠르고 일찍부터 경제 관념이 형성된 세대이다. 더구나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조직이나 단체 생활이 아닌 철저하게 파편화된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병사와 봉급에 거의 차이가 없고, 의무복무기간이 9~30개월이 더 긴 장교나 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병 복무를 선택할 것이다. 최소한 과제로 제시한 학군사관(ROTC)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축소를 인해 일시적으로 소대장 등의 더 많은 공석이 예상되나, 이는 시행 초기에 부족한 만큼의 인원을 더 선발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로 구분하는 등 운용상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다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제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간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군 체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금처럼 빠르게 과학기술과 전장의 양상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더 우수한 간부의 안정적 충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상황을 미연에 막고 복잡한 미래 전쟁의 승자가 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합리성에 기초하여 병보다 간부인 장교, 부사관 복무를 우선 선택하도록 군인사법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겠다.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

박 용 환

(향군 논문·논단위원, 동국대 교수)



들어가면서

최근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난 1월 19일 휴전을 맺었으나, 3월 18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함으로써 다시 전쟁상황으로 돌입했다. 이런 와중에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우며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 국제사회에 관세 압박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를 혼동의 세계로 몰아 넣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보 동맹까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가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취임 후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집단방위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친우크라이나 정책보다는 친러시아 정책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노골화하며 전통적 동맹관계에 구애받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우방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 사실과 다른 관세 수치를 제시하고 막대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에게 마치 일방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한·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미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카드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완전 단절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모든 대남협상 및 대화 기구를 해체하고 남북도로 연결 부분을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되었던 DMZ 내 GP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등 군사분계선 상에서 군사시설을 강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산지구 남한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 발사하면서 핵 무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의 지원 하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제고하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북·러 친선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2024년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에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전쟁에 북한이 지원한 군사물자는 최근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천여 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에 달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특수전병력(11군단) 1만 2천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미사일 기술 등을 비롯해 식량과 석유 등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드론(무인기) 전쟁’을 경험하는 등 현대전의 경험을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의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떠한 변수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의 정책변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자신들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과 정책에 대해서는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개되어서는 안 될 가장 위협스러운 상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

는 것이다. 이때를 북한이 호기로 판단하고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이다. 즉, 한미연합작전에 의존한 우리의 대응능력에 의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대비방향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은 모든 주권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맹’이라는 수단을 통해 부족한 안보 공백을 보완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동맹에 자신들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맞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서 실시된 자체 핵무장 찬반 여론조사 36건에서 핵무장 찬성률은 평균 61%였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맞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화 군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우주공간과 AI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첨단 과학화 위주의 전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공간 운용과 AI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과 장비확보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은 앞으로 전개될 현대전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자간 안보 동맹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유럽의 NATO와 같은 보다 강력하고 결속력 있는 다자간 안보 동맹 결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보다 폭넓은 외교·안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는 잃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

장 광 열

(향군 편집·논단위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쟁과 포로

전쟁은 국가 혹은 정치집단 간에 있어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인간이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의 삶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념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쌍방이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경우 전쟁이 발발한다.

이러한 전쟁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전쟁은 인간에 의해 시작되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로는 전시에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 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이라 정의된다. 어떻게 보면 교전국에 있어 포로는 성가신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포로를 관리해야 하는 인원과 시설 그리고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전국들이 포로를 관리하는 이유는 그대로 석방할 경우 적국으로 돌아가 다시 자국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향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적국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병력을 상대국에 포로로 잡히게 한 국가는 그 포로의 가치와 수에 따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국민들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투에 임하고 있는 현역이나 징집 대상 인원들에게 많은 심리적 압박이 초래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매체 등을 통해 적대국이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로 인한 당사국의 전쟁에 대한 범국민적 영향은 물론이고 세계적 여론의 동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2022년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은 막대한 인력과 국고를 소비하면서 자원의 부족에까지 봉착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러시아는 전쟁 물자와 더불어 병력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선택하였다.

2024년 10월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우리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연이어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규모 참전은 점차 사실로 굳어졌고 대규모의 병력 손실이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이러한 참전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다.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관계가 약해지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실전경험을 얻는 한편, 그동안 개발해 온 각종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그 실전 경험을 전 북한군에 이식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에 대한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에 부풀어 있는 불만을 잠재우고 독재적 정권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경제적 가난과 배고픔은 물론 서방의 자유사상에 노출되었는데, 김정은 정권은 미국 및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전시 상황을 조성하고 반미 사상을 확대하면서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안보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가적 궁핍으로 재래식 무기의 생산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러시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기사가 조용히 언론에 실렸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인 포로와 관련된 소식이 그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 대치한 정면을 피해 역공격을 실시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은

1차로 사단급 규모 정도인 12,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파병 초기, 낯선 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명의 북한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되어 현재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월 말까지 북한군의 전사자는 400여 명이며 부상자는 3,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 파병 병력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는 부상자들이 자폭을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당국이 북한군의 전쟁에 대한 파병 지원을 최대한 비밀로 하기 위한 의도로서 북한군에 대한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인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북한은 지난 1~2월에 1,500명 수준의 2차 파병을 하였으며, 3차 파병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 관광객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러시아의 고위급 관리의 북한 방문도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을 방문하고 우주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무인기를 공동 생산하고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선봉 항을 이용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물류 수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협력을 꾀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에 첨단전투 수행능력 향상방안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방기술대표단을 파견하여 MIG-29, SU-25 등의 전투기와 레이더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대 드론 작전 장비를 지원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군 포로의 의미와 우리의 대책

북한은 애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위한 이익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의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전수행 능력의 한계를 보인 러시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참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의 파병문제에 있어 북한 측이 먼저 제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러시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한 수단은 전쟁 물자와 병력이라 간주하고 이번 파병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포로들에 의하면 이번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단지 훈련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권력층에 의해 강제적으로 참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투 간 부상으로 적에게 생포될 상황이 되면 자폭하도록 하는 비인간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우리는 이들의 처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군 포로 상황을 묵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군의 포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북한 군사력의 러시아 지원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법을 통하여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불법성을 공유하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밀한 관찰이다.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하여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해 적응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 및 시험을 실행함과 맞물려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들의 전투력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 상황과 GFP(Global Firepower)의 군사력 순위 등으로 인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 능력 향상에 대해 진력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는 재평가를 통해 위협을 재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에 대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북한 수뇌부에 의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의도치 않은 참전을 당했다. 그리고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뿐 아니라 추가 발생 포로들을 상정하여 국제적 여론 형성과 국내적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